

‘생계형 창업’ 연매출 8000만원까지 5년간 세금 감면

국가전략기술 1조1000억원 세제 지원...총 세액공제 77% 차지
연소득 3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청년희망적금 비과세...고액·상습 체납자 가상화폐 강제징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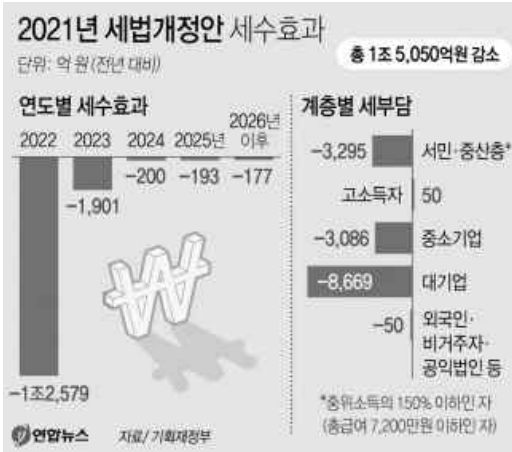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 기술에 1조1000억원 상당의 세제 지원을 쏟는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20%로 높이며, 근로장려금(EITC) 지급 가구도 30만 가구 늘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주식에 투자해 거둔 수익은 비과세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K자형 양극화' 완화, 국제 거래를 통한 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목표로 두고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기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범주 이외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설정하고 34개 전략기술에 대해 R&D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31개 대상시설의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증가분에는 4%포인트를 추가해준다. 이 분야 세제 지원 효과만 총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총 1조5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 중 77%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돼 있다.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해선 상생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포인트 올린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20만원을 세금으로 돌려 받는다는 뜻이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과 코로나 사태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로 대상을 늘리고 적용 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계형 창업 세제 지원(5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대상은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

대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상한은 200만 원씩 인상한다. 일례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을 기존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올린다. 이처럼 바꾸면 총 30만 가구가 새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19~34세)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청년이 3년 이상 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 70% 감면해주는 제도는 2년 더 연장한다. 비(非)수도권 소재 기업이 청년 등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할 경우 1인당 130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ISA는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얻는 이익은 비과세한다. ISA 계좌 내에 그 밖의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9% 세율로 과세한다. 개인투자용 국제에 대해선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을 9% 분리과세 하는 혜택을 준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는 강도 높게 옥죄는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했고, 게임이나 앱, 동영상 등 전자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 명세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구글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고자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체납자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 이전을 요구하고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기한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내년 말에는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일몰 기한이 도래해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소 제조용 천연 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용도와 무관하게 1kg당 8.4원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16개 세법 개정안은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상생카드’ 1조3879억 이용...지역화폐 자리매김



광주은행 송중욱(왼쪽 세번째) 은행장이 '광주상생카드 출시 2주년 기념 경품전달식'에서 당첨자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2주년 경품행사 광주 배달앱 ‘위메프오’와 협약

광주은행이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출시 2주년을 맞아 경품행사를 벌였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26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광주상생카드 2주년 기념행사 당첨자에

게 상금 100만원(1등) 등 경품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은행은 광주상생카드에 대한 지역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705명의 당첨자를 선발했다. 광주상생카드는 지난 2019년 3월 출시된 뒤 올 6월까지 1조3879억원 상당이 이용됐다. 지역 외 소비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광주은행은 광주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와 업무협약을 맺어 이 모바일 앱에서도 상생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송 행장은 “광주상생카드가 지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아파트 정전 인공지능 기술로 예방한다

한전, 위험예측 기술 개발

한국전력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고객 전기설비 위험예측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의 전력계량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고, 기상 데이터와 융합·분석해 향후 48시간의 부하 패턴, 최대 수요 및 발생 시각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한전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현상으로 고압 아파트 설비 정전이 2019년 205건에서 지난해 27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7~8월 아파트 정전은 133건 일어났는데, 연간 건

수의 절반(49%)을 차지한다. 폭염이 심한 올해도 과부하로 인한 설비 고장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아파트 전기설비를 관리·점검하는 전기 안전 관리자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해 고장이 우려되는 설비를 미리 점검하면 정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8월 초 출시)에서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를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전은 전국 고압아파트 약 2만5000호를 대상으로 연 1회 가량 전기설비 열화상 진단을 펼치고, 서울·6대 광역시 매매 중위값 평균 이하 아파트 가운데 15년 넘는 노후 변압기 교체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

사학연금, 퇴직급여 청구 알림 캠페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해 시행한 급여 청구 알림 캠페인을 통해 430여 건의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퇴직급여 사전청구제도 운영기간을 4개월 동안(2월 말, 6월 말, 8월 말, 12월 말)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학연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청구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마련했다.

또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에 이어 통신 3사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한 안내매체 확대,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청구 방안 모색, 정부24

를 연계한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 중에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24.95 (-29.47)
↓ 코스닥	1047.63 (-7.87)
↓ 금리(국고채 3년)	1.369 (-0.024)
↑ 환율(USD)	1155.00 (+4.20)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